

들개 변신 유기견의 역습?

주택가 폐지에 배회하며 위험 광주지역 출몰 신고 부쩍 늘어 개물림 사고도 매년 40~50건 자치구 '포획단' 꾸려 포획 활동

광주시 서구 유덕동의 한 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김애은(28)씨는 최근 '들개' 탓에 불안해하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여섯 마리의 들개 무리가 센터 인근을 배회하며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쓰레기통을 헤집어놓고, 보행자를 위협하는 등 골치를 썩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가끔 길고양이를 풀어가는 등 공격적인 모습도 보였다"며 "인근에 요양병원이 있는 터라 어르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컸다"고 말했다. 김씨의 신고를 받은 서구청은 지난 18일 유덕동을 찾아가 들개 6마리 중 3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 동물보호소로 인계했다.

최근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발생한 유기견 탓에 광주시에 '들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 서구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들개 포획사업'에 뛰어드는 등 광주시 각 자치구에서도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이달부터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단'을 운영, 본격적인 포획 사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벌써 7건의 들개 신고가 들어왔다. 아직까지 개물림 사고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요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산책 도중 들개 무리를 보고 놀라 넘어지는 등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구청은 들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방서로 연계해 찾으나 한계가 있었다. 소방관이 출동한 후에는 대부분 들개가 도망가버린 뒤였고, 이후 들개가 다시 출몰하면 서구청에 재차 신고가 들어오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매년 반복되는 들개 민원에 직접 대처하기 위해 올해 들개 포획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포획단은 마취총이나 엽총은 쓸 수 없어 그물망이나 포획틀을 이용해 포획한다. 포획에 성공하면 광주시 동물보호소로 인계하며, 포획 이후에도 들개가 나타나지 않는지 꾸준히 관리를 한다.

포획한 들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일간 보호 조치하며, 야생화가 심한 경우 공격성이 강하므로 보호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조치한다.

들개 문제는 광주 서구뿐 아니라 타 자치구에서도 오랜 골치덩이였다. 최근 반려동물인구가 증가하면서 들개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유기견도 늘어나고, 미처 구조되지 못한 유기견들이 들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견이 산으로 들어가 교배를 하고 2~3세대를 거치면 완전히 야생화가 돼 들개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시 반려견 두수는 10만 1412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시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2020년 3557건, 2021년 3285건, 2022년 3138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소방 개 포획 건수도 해마다 1000여건씩 이어지고 있다. 광주소방은 2020년 1090마리, 2021년

849마리, 2022년 864마리의 개를 포획했는데, 야생동물 포획 조치 건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2020년 54건, 2021년 46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40~50건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산을 끼고 있는 광주시 동구와 북구에서는 이전부터 들개 포획단을 만들어 대처해 왔다.

지난 2018년 광주 동구청이 광주에서 최초로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단'을 만들었으며, 지난 5년 동안 97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포획활동을 했다.

광주 북구청 또한 지난 2020년부터 '대형견 포획단'을 꾸려 지난 3년 동안 들개 90마리를 포획했다. 출몰 건수도 2020년 15건, 2021년 80건, 2022년 1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북구청 설명이다.

광주시 차원에서라도 실외견 증성화수술 지원,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 등 활동을 통해 들개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원한다는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을 경우에 치료비를 최대 5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안전을 위해 포획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들개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꼭 내장형 동물 등록을 해 주길 바라며, 불쌍하다는 이유로 포획된 들개를 풀어주면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 정상개방 외국인 출입 제한은 차별”

광주시민, 인권위원회에 진정

다음달 4일에 열리는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를 앞두고,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광주시민 문길주씨는 2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주인권사무소에 '무등산에 내국인 출입만 허용하는 광주시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씨는 진정 이유로 "오는 4일 무등산 정상 출

입 행사는 내국인에게만 허용돼 이주노동자와 같은 외국인은 무등산 정상에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거나 이를 차별하는 규정이 없다"며 "광주시에 내국인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외국인이 군사보호시설에 출입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해 출입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올해 9월 추진하는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에는 외국인도 제한없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

유출 학력평가 광주·전남 2만 3000명 응시

최근 불법 유출 파문이 인경교육청 주관 전국 연합학력평가에 광주·전남 152개교에서 2만 3000여명이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 전국 고교 2학년생 2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 자료가 유출됐다. 광주에서는 56개교 1만2000명이, 전남에서는 96개교 1만1000명이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46개교 9000명의 자료가 유출됐으며, 전남에서는 아직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정보가 유출된 응시 학생과 학

부모에게 이를 통지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홍보·가공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조7)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성적자료 온라인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텔레그램 측에 탑재된 자료를 즉시 삭제하도록 요청했다. 유출 피해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긴급상황실(031-820-0777)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육정책 감시... '광주교육시민연대' 출범

광주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

광주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광주교육청의 교육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22일 출범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2일 오전 광주교육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광주YMCA를 비롯한 9개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상임대표는 문기전 광주YMCA 사무총장이 맡는다.

시민연대는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이들과(학생)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지적하는 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광주교육청의 정책을 감시할 계획이다.

시민연대가 내놓은 정책과제는 ▲광주교육청·교육지원청의 각 위원회 공모제 전환 ▲학교운영위와 연계한 학교자치조례 ▲사학투명성·공공성 위원회 구성 ▲체육약정형 현장실습 폐지 ▲마을 단위 청소년 자치 공간 마련 ▲정치시민교육 활성화 등이다.

시민연대는 창단 후 첫 활동으로 '사립유치원장 고액급여' 문제와 '교육활동기본계획 폐지'를 뽑았다. 교육활동기본계획이 폐지되면 0교시, 야간자율학습 등이 학교 자율규정으로 이뤄져 '교육 과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시민연대의 설명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광 군의원들이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을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임영민 영광 군의원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원자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임 의원 등은 한빛 4호기 재가동중인 2020년 11월 9일 한수원이 약속한 7가지 사항에 대해 의

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한빛 4호기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 의원 등이 주장하는 7가지 의무사항은 '한빛원전 3·4호기 현안해결을 위한 범대위 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됐고, 지난 2020년 11월 한빛원전법규민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빛원자력 본부장이 이 문서에 사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 끼 든든히 드시고 힘 내세요” 22일 광주시 북구 천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에게 봉사원들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열 | 학 과 | 모집인원 |
|------|----------|------|
| 인문사회 | 신 학 과 | 19 |
| | 한국어교육학과 | 1 |
| | 복지상담융합학부 | 7 |
| 사범 | 유아교육과 | 2 |
| 총 계 | | 29 |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0(월) ~ 24(금)
 · 전 형 일: 2023. 2. 25(토) 오전 10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대 학 원 | 과 정 | 모 집 학 과 | 모집인원 |
|---------|-----|-----------------|------|
| 신학대학원 | 석사 | 신학과(M.Div.) | ○ |
| | | 성경연구학과(Th.M.) | ○ |
| | | 신학과(Ph.D.) | ○ |
| 일반대학원 | 박사 | 목회학과(D.Min.) | ○ |
| | | 사회복지학과(D.S.W.) | ○ |
| | | 코칭심리학과(D.Psy.) | ○ |
| | | 신학과(Th.M.) | ○ |
| | | 유아교육학과(M.Ed.) | ○ |
| 상담치료대학원 | 석사 | 상담심리치료학과(M.A.) | ○ |
| |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 |
| 사회복지대학원 | 석사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 |
| | | 사회복지학과(M.S.W.) | ○ |
| 국제대학원 | 석사 | 한국어교육학과(M.Ed.) | ○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2. 21(화) ~ 23(목)
 · 전 형 일: 2023. 2. 24(금)

임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